

풍년 두려운 '재고쌀 재앙'

소비 줄고 수입 늘고... 전남 양곡창고 다 찼다

올 재고량, 적정량 두배달할 듯... 가격 하락도 지속

대북지원 등 특단의 쌀 소비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'쌀 대란'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.

전남지역 쌀 재고량이 지난달 말 현재 45만6000t에 달하고 올해만도 140여만t의 재고가 쌓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는 내리막이기 때문이다. 올해 재고량은 국내 쌀 소비량을 고려할 때 적정 재고량의 두 배에 달한다.

◇쌀대란 현실화=쌀 재고량 증가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 부진이다.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광주·전남지역의 지난 2009년 1인당 쌀 소비량은 각각 81.3kg, 69.6kg에 그쳤다. 양 지역을 평균해도 80kg짜리 쌀 가마도 먹지 않는 셈이다. 농협 전남지역 본부 양곡담당은 "전남지역이 농도임에도 매년 쌀 소비량이 2%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"라고 말했다.

쌀 소비량 감소는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다.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지난 1990년 이후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2.4% 가량 감소하고 있다. 1인당 쌀 소비량은 1998년 100kg 이하로

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70.4%까지 급락했다.

재고량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. 전남지역 쌀 재고량은 지난달 말 현재 45만6000t으로 지난해(38만6000t), 2008년(36만5000t)에 이어 계속 불어나고 있다. 쌀 생산량은 지난해 91만t, 2008년 90만t으로 꾸준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.

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재고는 지난 2008년 68만t에서 지난해 100만t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140만t에 달할 전망이다. 이에 따라 쌀값도 지속적으로 폭락, 지난 17일 산지기준으로 80kg 한 가마당 13만2460원으로 2008년과 2009년 동기(16만2288원과 15만1412원)에 비해 각각 18.4%와 12.5% 떨어졌다. 3년 연속 종년인 올해 추수가 시작되면 쌀값 추가하락도 우려된다.

이처럼 쌀값 폭락이 지속되자 전남 지역 RPC들이 판매를 중단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쌀 보관 창고도 보관을

육박하거나 초과하고 있다.

전남지역 1269곳의 정부 양곡창고도 공공비축미 43만5000톤이 쌓여있어 빈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. 게다가 쌀 의무수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매년 2만톤 늘리게 돼 있고, 올해 쌀 수입량은 32만7000t에 이른다.

◇대책은 없나=농민들은 쌀 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대북지원 재개라고 입을 모은다.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0만~40만t의 쌀이 북측에 제공돼 재고량을 크

게 줄였기 때문이다. 실제 이 기간 대북지원용과 가공용을 합해 70만t의 쌀이 소비되는 효과를 거뒀다.

전문가들은 또 묵은쌀 재고를 처리하고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의 과잉공급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.

예컨대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에서 떨어진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쌀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.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등에서 직접 아침, 저녁을 급식으로 제공하지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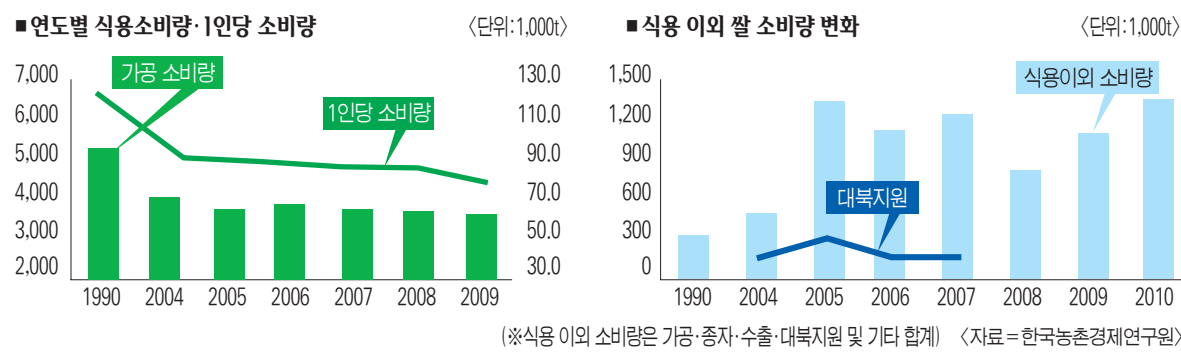
일본에서는 아프리카 등 제3국 지원방안도 거론하고 있다. 일본은 지난 1968년 도교라운드를 계기로 만들

어진 '식량원조 규약'을 토대로 매년 20만t 가량을 식량원조에 사용하고 있다.

국내산 쌀의 브랜드 파워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전략도 요구되고 있다.

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는 '쌀 수요확대 방안' 논문에서 "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쌀 브랜드를 내놓고 있으나, 같은 지역 내에서도 브랜드가 여러개여서 통합적인 브랜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"며 "고유 품종 쌀에 대한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"고 말했다.

/윤영기기자 penfoot@kwangju.co.kr



올해 전남도내 쌀 생산량이 88만t에 달하는 등 대풍을 예고하고 있지만, 쌀 재고량 증가와 쌀값 폭락이 예상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. 사진은 지난해 화순도곡미곡종합처리장에서 실시된 산물벼 수매. <광주일보 자료사진>

당정 엇박자...대북 쌀지원 표류?

정치권 모처럼 한목소리 청와대·정부 강경 입장

李대통령 "아니라는데 왜 자꾸..."

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북 쌀 지원 사업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상당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.

25일 한나라당 고홍길 정책위의장은 25일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, "정책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바 없고 당정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"고 밝혔다.

그는 이어 "적정 쌀 재고량을 우리가 70만t으로 볼 때 10월말 현재 150만t에 이르는 쌀 재고가 있는 것은 사실"이라며 "그러나 북한에 대한 쌀 지원에 대해서는 당정간에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"고 재차 강조했다.

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으로부터 "인도적 대북 지원을 통해 쌀 수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"라

는 질문에 "인도적 지원에는 동의한다"며 "그러나 (현재의 남북관계 색깔은) 북에서 자초한 것인만큼 최소한의 사과와 태도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이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대북 쌀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당정 간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.

실제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22일 당·정·청 9인 회의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수해로 가중된 상황이며, 우리 쌀 수매철이 다가와 재고관리가 절박하고, 남북 대화의 불교를 틀 수 있다며 쌀 지원 재개

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.

또한, 지난 23일 인사 청문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, "검토할 필요가 있다"는 입장을 나타냈다.

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여권의 입장이 급변한데는 청와대와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.

이를 반영하듯,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, "아니라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"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.

또한, 통일부도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"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할 계획도 갖지 않고 있다"는 입장을 밝혔다.

이에 따라 모처럼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제기했던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정부와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류로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.

정치권 관계자는 "여권의 엇박자로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"이라며 "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항"이라고 말했다.
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상위권 품질의 당 중저가 곡물 취급점으로,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찬란한 문화유산의 총 집합체

10월30일~11월8일 (10일간) 무안소림사

무안 ↔ 소림사 직항 열차

구분	무안	소림사
10월 30일	10:00	10:30
10월 31일	10:00	10:30
11월 1일	10:00	10:30
11월 2일	10:00	10:30
11월 3일	10:00	10:30
11월 4일	10:00	10:30
11월 5일	10:00	10:30
11월 6일	10:00	10:30
11월 7일	10:00	10:30
11월 8일	10:00	10:30

무안: 061-226-6070 | 소림사: 061-226-6070

무안소림사: 061-226-6070